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장
hgjeong@kiep.go.kr

이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brlee@kiep.go.kr

백종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연구원
jhpek@kiep.go.kr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세안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도도 높은 지역임.

-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대상이며,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투자대상임.
- 특히 최근 사드문제로 불거진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로 우리나라 무역투자의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대안 생산기지, 대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2000년대 아세안의 FDI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기인한 2008~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음.

- 2004~14년 사이 아세안이 전 세계 FDI 저량(stock)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6.8%로 증가하였으며, FDI 유량(flow) 기준으로도 2004~06년 평균 5.0%에서 2013~15년 평균 8.6%로 증가하였음.[1)]
- 아세안 각국의 역내 FDI 비중(Stock)의 경우 2004~15년 동안 싱가포르가 58%의 높은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4%에서 13%로 높아졌음.
-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별 FDI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이 2013~15년 평균 아세안 전체 FDI에서 15.4%의 비중을 차지하며 제1위의 투자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11.6%), 미국(9.5%), 네덜란드(6.3%), 중국(5.8%) 순을 기록함.
- 아세안 국가별 FDI 유입 추이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아세안 3대 고소득국가군, 3대 중소득국가군, 3대 개도국가군으로 구분하여 5대 주요 투자국을 중심으로 비교해본 결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이루어진 고소득국가군은 미국, EU,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로 이루어진 아세안 개도국군의 주요 투자국들은 중국, 한국, 태국, 베트남 등 신흥국들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연구에서는 아세안 소득군별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국가들의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서 전략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진출 관련 한국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함.

1)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downloadPrompt.aspx(검색일: 2016. 10. 26).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ASEAN 개별국가로의 투자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바, 첫째 선진국의 투자가 우세한 지역과 둘째, 신흥국의 투자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유형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아세안 국가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상기 분석을 통해 신흥국형 투자유형에 속하는 한국기업의 투자 촉진과 진출 원활화를 위한 통상 정책을 제안함.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와의 중요한 차별성으로 아세안 개별국가로 유입되는 FDI 추세에 따른 그룹 분류 및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과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FDI 통계가 없어서 계량분석이 매우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었고, 아세안 개별국가에 대한 간단한 현황 파악에 머물렀음.
  -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경제적 이질성이 큰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단순히 국가별 FDI 현황 파악을 넘어 아세안 10개국에 유입되는 FDI를 소득군별 특징과 함께 기존 FDI 이론에 근거하여 유형별로 분류한 후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음.
  - 둘째, ASEAN Secretariat 및 UNCTAD 등에서 아세안 국가로의 FDI 유입 관련 통계를 확보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음.

3) 연구방법론

-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한계가 있었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였음.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이용하여 FDI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계를 분석하였음.**
  - 공분산 구조분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구성한 후, 이 잠재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음.[2)]
  -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FDI 결정요인에서 그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2)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사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Jolliffe(2002) 참고. 아울러 Cattell(1978); Lawley and Maxwell(1971); Lewis-Beck(1994); Rummel(1970)도 요인분석의 활용 관련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설정하고 측정변수를 통해서 각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였음.

- 공분산 분석은 최근 많이 사용하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데이터에서 측정된 공분산과 모형의 공분산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분석임. 추정 시 그 비교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통계량이 나오면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이 연구모형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함.[3)]

3. 주요 결론

- **아세안 FDI 유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으로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아세안 소득군별 FDI 유입의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결과,**
  - 아세안 상위 소득군에 속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가운데서도 싱가포르만이 수평적 FDI 특징을 보였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자국의 경제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일본, 싱가포르,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FDI가 많은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일본 제조기업, 베트남은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국가들 또한 섬유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함께 지리적으로 가까운 태국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기(旣)생산기지를 보완하는 생산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같이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인구와 경제규모가 크고, 아세안 상위 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추구형 FDI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 전체 FDI의 산업별 유입 비중을 2004~06년 평균과 2013~15년 평균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시장추구형 FDI 특성이 강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58.8%에서 64.7%로 확대됨.

-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 계약 이행, 재산권 등록 및 무역환경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국가간 비즈니스 여건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3) 관련 연구로 Jeong H. G.(2014) 등이 있다. Jeong H. G.(2014)에서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20개의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여, 이 요인들이 홍콩을 포함한 34개국에서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 부문에 FDI를 유치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 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및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간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음.
-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여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분산 구조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 창업 소요시간, 수출시간, 수입시간, 도산율 등 4개 변수로 이루어진 제1요인과 계약, 창업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 4개 변수로 구성된 제2요인이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제1요인 가운데에서는 수입과 수출에 걸리는 시간요인이 각각 -0.99와 -0.95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됨.
- 제2요인 가운데에서는 계약 체결에 걸리는 기간요인이 -0.98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출진흥정책(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변수와 개방도(Openness) 순으로 각각 0.87과 0.77의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이 두 요인들과 아세안 역내 FDI간 회귀분석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규제 관련 무역자유화와 연관된 요인들은 역외국가의 대아세안 FDI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됨.

4. 정책 제언

1)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 **아세안 생산네트워크의 연계성 강화 및 전략적 활용**

- 아세안은 중국대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역외국으로부터의 FDI를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형성과 RCEP 협상을 계기로 GVC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Maguire *et al.*(2015, p. 5)는 향후 10~15년 내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세 그룹의 소지역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 첫째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로 구성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다른 두 그룹을 뒷받침하는 노동집약적 생산기지의 메콩 선도국가(The Mekong Frontier)군,
- 둘째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구성된 비용대비 고효율의 강점을 가진 중간제조

업 경쟁국가군,
- 셋째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구성된 아세안 고부가가치 산업과 금융·기술허브의 고소득 경제국가군임.
-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심화됨에 따라 세 그룹의 소지역 경제권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은 이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메콩 선도국가군이 중간제조업 국가군의 역내 FDI를 통해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역내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은 RCEP과 AEC 등 아세안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환경 아래 아세안 진출전략을 재모색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대아세안 투자 진출을 결정할 때 아세안 각국의 역내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생산, 유통, 조달, A/S, R&D 등 생산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아세안 투자 진출기업간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은 상호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어, 아세안에 대한 장기적 전략 아래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내 제조업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FDI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전략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함.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 및 제도적 변화에 효율적 대응

-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아세안의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함께 아세안의 국가별 통상정책, 산업정책 및 제도적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은 각국의 FDI 유형, 기술·자원·인적 여건,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산업 유치정책,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일례로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RCEP 협상에 참여하는 반면 TPP에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6개국만이 참여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고 있음.
- 한국기업들은 급변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분업체계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지에 적합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모색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세안 고소득국가군을 제외한 여타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은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는 아세안 FDI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제외한 여타 아세안 국가의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관련 정책 및 제도적 투명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지 상관행과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시장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편임.

- 아세안 현지 진출에 따른 외국기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여건을 최소화하는 한 방편으로 현지 여건 및 관련 업계 특성에 정통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현지 진출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줄여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코트라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공적으로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투자파트너를 선정할 때 회사 규모나 브랜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작지만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을 선택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한 바 있음.[4)]
-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반드시 유리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대상산업의 성격, 현지 산업여건, 합작투자에 따른 부정적 요소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추진할 필요

2)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RCEP 협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 원산지 규정 표준화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RCEP이 체결될 경우 세계인구의 약 48%, GDP의 약 31%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형성됨.
- RCEP 협상에는 특히 글로벌 생산거점인 중국, 아세안, 인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대한 시장접근성 향상, 투자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은 한국의 생산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짐.
- RCEP 협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는 아세안 FDI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는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러한 아세안+1 FTA뿐 아니라 한·베트남 FTA, 일·CEPA, 인도·말레이시아 CECA, 중·태국 FTA 등 다층적으로 FTA가 체결되어 있음.
- 이들 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 적용기준이 [표 1]과 같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성 측면에서 FTA 특혜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RCEP 참여국간 기체결 FTA 내 원산지 규정 적용절차에 복잡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RCEP은 동아시아 내 원산지 규정 표준화를 통해 원산지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임.

4) 코트라(2007),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화 전략: 성공 노하우」, Global Business Report 07-041.

표 1. 아세안+1 FTA 원산지 규정

협정문	원산지 판정기준	일반기준
ATIG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AANZFT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ACFTA	WO, RVC, SPR	RVC(40)
AIFTA	WO, 35% RVC+CTSH	35% RVC + CTSH
AJFT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AKFTA	WO, RVC, CTC, PSR	RVC(40) or CTH

자료: Medalla(2011).

- 원산지 규정의 표준화뿐 아니라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등과 관련된 규정은 본문의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이 아세안 FTA 주요 결정요인변수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간 수출입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한·아세안 FDI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FTA 및 BIT

- 투자협정문 체결은 해당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협상단계에서 각국 법제도의 미비성, 투자 관련 제도적 투명성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양국간 투자제도 차이 등과 같은 현지 진출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임.[5)]
- 본문의 분석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실제 제도적 투명성이 높은 국가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등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안 각국의 제도적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세안의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규제수준은 싱가포르와 같이 개방도가 높은 국가가 있는 한편 그 외 아세안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큰 격차를 보여 향후 개선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정부는 1989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싱가포르,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대 이후 한·아세안 FTA, 싱가포르, 베트남 FTA를 체결함으로써 투자자유화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호

5) 정형곤 외(2010), p. 167.

경제협력제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왔음.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은 2010년 태국을 마지막으로 11개국 모두 발효된 상태이며, 서비스 무역협정은 2009년 5월 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7개국이 우선 발효하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는 아직 발효되기 전임. 투자협정은 2009년 9월 한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4개국만이 발효한 상태임.
-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개별국과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 중국보다 아세안 시장접근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아세안 투자협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문은 한국의 기체결 FTA 대비 낮은 수준인 한편 아세안의 기체결 FTA과 비교하여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표 2 참고).

표 2. 아세안+1 FTA 투자자유화 관련 규정

구분	AANZFTA	ACFTA	AIFTA	AKFTA
내국민대우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설립 후 단계에만 적용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최혜국대우	규정 없음(추후 논의)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ISDS에 대해서 예외)	규정 없음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비합치조치의 현상 동결 의무	현재 유보에 적용	규정 없음	현재 유보에 적용	현재 유보에 적용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이행요건 금지	TRIMs 수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TRIMs 수준
국적 요건 부여 금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적용

자료: 라미령, 김제국(2017).

- 한·아세안 투자협정문에는 설립 이전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보장, 투자의 일반적 대우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절차,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제한 및 거주요건 부과 제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며, 자동적 최혜국대우 부여, 이행요건 부과 금지 의무, ISDS 절차 개선 등은 협상문 발효 이후 5년 이내 재협상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과 아세안 각국간 양자 투자협정은 1980년대 말레이시아, 1990년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과 체결한 바 있으며 2000년대에 브루나이와 베트남(재체결)과 체결한 바 있음.

- 종합해보면 한·아세안 투자협정문은 아세안 국가들의 기체결 FTA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에서 체결되었으나 투자협정문을 발효한 국가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한국 이상 4개국임. 양자 투자협정문도 브루나이와 BIT를 2004년에 재체결한 베트남을 제외하면 모두 투자자 보호 조항이 강조되던 1990년대에 체결되었던 건임.
- 투자협정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안정성, 예측가능성, 제도적 투명성 등을 통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결과[6]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투자협정을 발효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발효를 권유하는 한편 FDI 규제수준이 미흡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BIT 체결을 검토하여 투자자유화를 추구하는 등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체결된 FTA는 우리 기업의 활용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필요한 추가 자유화 논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3. 한·아세안 회원국별 협정별 발효연도

국가	상품 무역협정	서비스 무역협정	투자협정	BIT	양자 FTA
한국	2007. 6. 1	2009. 5. 1	2009. 9. 1		
말레이시아			-	1989. 3. 31	-
싱가포르			2009. 9. 1	-	2006. 3. 2
인도네시아		-	-	1994. 3. 10	중단
미얀마		2009. 5. 1	-	(2014. 6. 5)	-
베트남			2009. 9. 1	2004. 6. 5	2015. 12. 20
필리핀	2008. 1. 1		-	1996. 9. 25	-
브루나이	2008. 7. 1		-	2003. 10. 30	-
라오스	2008. 10. 1	-	-	1996. 6. 14	-
캄보디아	2008. 11. 1	-	-	1997. 3. 12	-
태국	2010. 1. 1	2010. 1. 1	2009. 9. 1	1989. 9. 30	-

자료: UNCTAD,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CountryBits/111(검색일: 2017. 2. 1).

6) UNCTAD(2004); 정형곤 외(2010).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 추진

- 본문의 아세안 각국 비즈니스 여건 분석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경영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아세안 역외지역에서 아세안으로 들어오는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 창업 소요시간, 수출입 소요시간, 도산기업 채권회수율로 이루어진 제1 주성분과 계약집행 소요시간, 창업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로 이루어진 제2 주성분이 아세안의 FDI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1 주성분과 제2 주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성격을 보면 관련 정부관계자들의 재량권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국가간 협정문 체결을 통해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개선조치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아세안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큰 아세안에 대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연간 700만 달러),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사업(연간 1,000만 달러), 한·메콩 협력사업(연간 100만 달러) 등 연간 약 4억 달러 상당의 대아세안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산업적 경합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한계가 있음.[7] 이에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아세안 지원 특화전략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7 Doing Business 지표에서 전력수급(getting electricity), 계약집행(enforcing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아세안 FDI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채권회수율과 창업(starting a business) 관련 지표에서 각각 세계 4위, 11위의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8]
- 따라서 본문에서 도출된 아세안 FDI 결정요인을 근거로 할 경우 아세안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통한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을 제안함.
- 또한 본문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아세안-6국가들과 CLM 국가들 간 상이한 비즈니스 여건에 따른 개선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흥국으로의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여건 등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우위를 보유한 전자통관시스템 등과 관련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7) 중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주도함으로써 아세안 인프라 구축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세안 각국에 대한 별도의 원조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2016~2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1,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16년부터 3년간 메콩유역 개발에 6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있다.

8)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korea(검색일: 2017. 3. 10).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아세안 통합,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

- 본문의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결과, 특히 창업시간, 수출입시간, 도산기업 채권회수율 요인으로 이루어진 제1 주성분이 아세안 FDI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아세안 각국의 통상정책, 산업발전정책과 관련이 있는 제도적 요인들임.
- 앞서 기업전략부문에서도 아세안 회원국의 급변하는 분업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각국의 산업정책, 통상정책 및 관련 제도의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9] 다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일 것임.
- 한국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하는 다자간 민간경제협력체인 '한·아세안 Business Council'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정부지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의 주요 업종, 수요분석을 통해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 KOTRA, 상공회의소 등 해외진출지에 있는 해외진출 지원기관간 협업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면 장관 주재 해외진출 지원기관 회의를 주관하여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의 일원화를 꾀한 바 있음.
- 국가 차원에서 대아세안 중장기 진출전략, 한·아세안 경제협력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일·아세안 포럼을 통해 일·아세안 전략적 경제협력 로드맵(2012~22년)을 작성하여 2022년까지 양자간 투자, 교역을 두 배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KIEP

9) 싱가포르 관련 연구자 면담결과 싱가포르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관료들의 경제자유화, 외국인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부흥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의한 관련 지원정책, 서비스 부재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싱가포르 관계자 면담(2017. 3. 2).